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51
----------	------

발의연월일 : 2025. 1. 31.

발 의 자 : 강득구 · 김남근 · 김남희
김병주 · 김성환 · 김준혁
김태선 · 송재봉 · 이광희
임광현 · 정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②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급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장제6절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 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 305조의 죄,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 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 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 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죄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당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생 략)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균형 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 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 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 은 급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 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략)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과 제4항-----

-----.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65조의2(이 법 적용 대상으로 부터의 배제) ① 이 법을 적용 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
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
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
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
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
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5조의2, 제5조의4 및 제5
조의5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
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
까지에 따른 죄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
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
5조의 죄

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5

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

3의 죄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